

김정은시대 북한의 변화와 중북관계

베이징대 金景一



김일성 김정일시대 북한 개혁개방의 시도

- ▶ 1980년대 북한은 중국과 같은 시공간대에 개혁개방 시도
- ▶ 김일성 무려 5차례 중국을 방문, 덩샤오핑과 함께 개혁개방 현장 시찰
- ▶ 중국 최고지도자인 등소평, 조자양, 호요방, 이선념, 양상곤, 강택민 등의 방북, 양국 관계 황금기
- ▶ 중국 1983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발표, 북한도 1984년에 “합자경영법” 발표,
- ▶ 북한 뒤이어 “외국인 소득세법”, “외화관리법”, “자유무역구법” 등 발표
- ▶ 북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슬로건

북한 개혁개방시도 좌절의 결정적 요소

- ▶ 중국 “문화대혁명”때문에 경제가 붕괴직전, 개혁개방이 절박
- ▶ 북한 1980년대 중반 경제가 절정, 개혁개방이 중국처럼 절박하지 않음
- ▶ 1980년대말 중국의 “천안문사태”, 구소련의 해체,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북한 쇼크, 개혁개방때문이라고 인식, 개혁개방포기, 핵개발의 길을 선택
- ▶ 중국 천안문사태후 덩샤오핑 남순강화로 본격적인 개혁개방, 그후 30년 천지개벽의 변화
- ▶ 북한 30년 핵개발,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같은 처절한 대가 지불

김정은시대 비정상화의 정상화

- ▶ 김정은 시대 핵심키워드는“변화”
- ▶ 김정일시대 당, 정, 군 시스템 비정상적 운영
- ▶ 국방위원회가 최고권력기구, 위기관리시스템 선군정치
- ▶ 김정은시대 당, 정, 군 정상화 실현, 당 정치국, 당중앙전원회의 정상화
- ▶ 김정일시대 “유일사상 10대원칙” 김정은시대“유일영도 10대원칙”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공산주의” 표현 삭제, 당의 권위와 절대적영도 복원
- ▶ 경제건설의 중심지위 확립”
- ▶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달리 과감히 자기를 반성하는 개방된 모습
- ▶ 목표를 설정하면 드팀없이 밀고 나가는 추진력



김정은 시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 ▶ 내각책임제와 내각중심제 특히 강조
- ▶ 내각의 주도하에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탐구, 실천
-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확립. 새로운 전환. 인적, 물적, 지적 자원개발
- ▶ 2012년부터 농촌의 포전담당제 등 시범, 점차 전면 실시.
- ▶ “6.28조치”와 ‘5·30 노작’ 으로 불리는 새로운 개혁조치

김정은 시대 중앙권력의 이전

- ▶ 고도로 집중됐던 권력이 “경영자주권확대”, “경영권한의 하방” 방식으로 공장, 기업, 농촌, 지방정부, 개발구, 중앙은행 등으로 생산권, 분배권, 무역권등이 이전
- ▶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 권력을 아래에 내려 보내는 과정,
- ▶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 자율경영권 부여, 기업이 국가계획외의 생산 내용과 목표를 자체로 설정,
- ▶ 제품 판매가격, 판매방식을 선택, 손익을 자체로 결산
- ▶ 기층에 외사권 부여, 외화벌이, 외화구좌 설치, 대신 국가에 바치는 달러임무량을 할당
- ▶ 경제개발구 개발구 법에 따라 경제무역관리 면에서 많은 권력 부여

경공업우선 정책과 국산화

- ▶ 경공업우선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기업과 공장들의 가동을 정상적 수준 회복
- ▶ 1980년대 초반 중국의 경공업 우선발전정책과 같은 맥락
- ▶ 김정은 생산의 “정상화” 강조, 공장기업소 “만부하” 강조
- ▶ 북한자체 제품생산에 주력, 소비품시장과 양성순환 시도
- ▶ 평양의 “광복지구 상업중심”의 대형 마트 80%이상 국산화

김정은 시대 시장경제요소의 확장 (1)

- ▶ 계획경제 무력화, 배급제 유명무실, 아래로부터 위로의 변화
- ▶ 북한은 생존을 위해 “시장” 을 선택, “시장” 은 북한주민들의 생존수단
- ▶ 2009년 계획경제강화와 시장축소를 목표로 하였던 “화폐개혁” 실패
사실상 “시장경제요소”의 힘에 밀린 것
- ▶ 초기 중국 사상해방으로 시장경제유도, 북한 사상해방이 불필요 할 정도로 시장에 올인
- ▶ 김정은정권 들어서서 200여개의 장마당이 500개로 확장
- ▶ 북한 “계획경제” 와 “시장경제” 의 힘겨루기, 1980년대 중국이 겪었던 혼란과 비슷

김정은 시대 시장경제요소의 확장 (2)

- ▶ “시장화” 끈질긴 생명력, 북한 경제의 버팀목 역할
- ▶ 초기 중국 사상해방으로 시장경제유도, 북한 사상해방이 불필요 할 정도로 시장에 올인
- ▶ 국가는 각 기업, 사업단위에서 자기 절로 출로를 찾도록, 각 기업, 사업단위 돈벌이에 능한 인재 중용, 인재영입을 위한 경쟁, 인재 유동, 간부 세대교체
- ▶ 평양에 상점과 식당이 우후죽순, 각 기업과 사업단위에서 복리 증진을 위해 개설, 실제 돈주나 개인들이 운영
- ▶ 이러한 변화, 북한체제에 있어 끊임없는 도전

김정은 시대 시장경제요소의 확장 (3)

- ▶ 평양인구를 200만명, 30만명만 시장에 관련되어도 일가족 4명, 120만명이 시장과 연관
- ▶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시장에 투입,
- ▶ 시장경제요소가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 시장경제요소 북한정권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확장
- ▶ 북한변화의 희망, 북한 전역에 퍼져가는 시장경제의 요소를 확장하는데 있을 것

변화의 핵심은 관념과 의식, 가치관의 변화

- ▶ “수령유일지도체제”, 수령에 대한 충성이 가장 중요한 기반
- ▶ 시장경제요소 확장, 돈주, 중산층 증가, 돈과 시장에 대해 “충성”
- ▶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살 수 있다는 관념이 변화를 촉구
- ▶ 개인주의, 시장경제 관념이 깊이 뿌리를 박고 있음
- ▶ “개혁”과 “시장경제화”에 힘입어 북한경제 오름세를 보여왔음

노선의 전환과 실질적 개혁개방의 선언

- ▶ 노동당 7기 3차전원회의에서 선포한 병진노선의 종식, 경제발전을 새로운 전략노선 획기적인 사변. 중국의 11기 3중전원회의에 버금가는 실질적 개혁개방의 선언
- ▶ 김정일시대의 선군정치를 종식
- ▶ 김정일시대의 상징인 핵미사일개발도 마침표
- ▶ 김정일시대의 종식과 김정은 시대의 개막 선포
- ▶ 새로운 시대 새로운 노선이 모든 것을 결정, 중국은 11기 3중전회의의 노선 전환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오늘의 중국을 만듦, 북한도 이 노선 전환이 새로운 북한을 창출할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김정은시대 도약식발전의 시도

- ▶ 덩샤오핑 40년전 방북시 김일성에게 60년대 현대화가 다르고 70년대 현대화가 다르다면서 “반드시 국제적인 선진기술을 우리 현대화의 출발점으로 하여야 한다”고 역설
- ▶ 북한은 삐삐나 대형급핸드폰 생략, 직접 3G 핸드폰시대에 합류, 도약식 발전을 시도,
- ▶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새 재료기술, 새 에너지기술분야 주력
- ▶ 세계가 도달한 과학기술수준을 최단기간내에 도달하려고 시도
- ▶ “도약식발전”, “개혁개방”보다 체제에 위험부담이 없다고 판단
- ▶ 2022년까지 북한을 IT강국으로 건설, 최첨단기술로 “단숨에” 최정상에 오르려 함
- ▶ 세계 변화의 흐름을 타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합류하려 함

북한변화에 필요한 여건 조성

- ▶ 김정은 집권초기 “개혁개방”의지를 파격적으로 보여줌
- ▶ 하지만 북한은 “변화”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함
- ▶ 한국 지난 정부, 북한의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변화”를 외면
- ▶ 북한을 전례없이 “악마화”, 북한의 적개심 자극
- ▶ 북한 외부세계와 경제교류를 확대하면 시장세력에 힘이 실릴 것
- ▶ 시장세력의 확장- 시장수요의 증가- 변화의 선순환을 이루게 될 것

“5개년 전략”의 목표와 제재대비 자구책

- ▶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표대회에서 국민경제의 결정적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2016-2020년 “국가경제발전 5년전략”발표
- ▶ 2020년까지 전력문제를 기본상 해결, 식량문제는 철저히 해결한다는 목표
- ▶ 국내 최대규모의 단천수력발전소를 건설
- ▶ 북한 최대의 원산세포지구 목축업기지를 건설
- ▶ 2.8연합기업을 확건, 2000여개 유기화학비료공장을 건설
- ▶ 국방공업의 과학기술을 민수공업에 돌리고 경공업을 발전
- ▶ 연간 10000대 80마력 트랙트를 생산하는 금성트랙트공장을 확건
- ▶ 무중유 점화기술을 개발, 대량의 중유를 절약
- ▶ 갈색탄에서 석유를 제련하는 탄소하나화학공업건설

제재가 북한 시장경제요소에 미치는 영향

- ▶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자강력”과 “국산화”를 고취
- ▶ 경공업에 올인하여 국내 소비수요를 충족시키려 노력
- ▶ 고강도의 제재가 계속되면 새로운 에너지가 주입되지 않아 자금이 고갈
- ▶ 경제가 위축되면서 신생 중산층과 “장마당”세력 위축
- ▶ 제재, 시장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자본주의화”의 싹을 자르는 결과

“지경학적해법”으로 “지정학적갈등” 해소

- ▶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에 올인하도록 지경학적인 요소를 강화
- ▶ 북한이 고속철, 고속도로, 경제개발구 건설로 경제건설이 붐을 이룬다면 시장경제화가 가속화, 핵에 대한 집착이 약화
- ▶ 제재해제 북한의 변화를 다그치는 촉매제역할
- ▶ “제재”는 지정학적갈등을 “지정학적”으로 풀자는 것, 갈등이 “전쟁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을 것
- ▶ 중국 대륙과 대만의“선경후정”의 지경학적접근, 타산지석으로
- ▶ 양안 항공편만 매주 560편, 통신, 인적 왕래 자유

북한의 개혁개방과 비핵화의지의 연동성

- ▶ 비핵화와 개혁·개방 의지는 연동, 나라를 최빈국에서 부강한 나라로 건설하려는 의지와
개혁개방 의지가 강할수록 비핵화 탄력을 받을 것
- ▶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 완화 북한의 개혁·개방에 힘을 실어줄 것
- ▶ 북한개혁개방을 격려하고 개혁개방을 위한 조건을 창조, 북핵문제해결의 지름길
- ▶ 북한 **2012 ~2015** 4년간 북한 매년 경제개혁 조치가 나왔지만 **2016년** 이후 대북제재 국면에서 경제개혁조치 스톱

북한사회 단순사회로부터 복잡한 사회 진입

- ▶ 북한 시장경제 요소가 파생되며 사회는 점차 ‘자율적’ 경쟁으로 돌입
- ▶ 많은 문제가 개혁의 욕구 또는 사회 문제로 부상, ‘풍선 효과’
- ▶ ‘계획경제’ 의 그릇으로 오늘의 북한을 담기 어려움
- ▶ 단순한 ‘계획사회’ 로부터 복잡한 현대사회로 진입
- ▶ 북한의 경제발전 노선이 성공하려면 북한식 개혁 개방이 필수
- ▶ 돌파구는 비핵화를 통한 빅딜에
- ▶ 북핵은 오늘의 국면을 일거에 타파하는 ‘만능 보검’ 이 될 수도 있고
- ▶ 북한의 경제발전 노선을 가로막는 ‘계륜’ 이 될 수도



북한을 시장경제의 바다에 빠뜨려야

- ▶ 문재인정부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신북방정책”
- ▶ 북핵문제의 지경학적 해법이자 “경제 문법”
- ▶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에 올인하도록 지경학적인 요소를 강화
- ▶ 북한의 시장경제요소를 확장, 북한을 시장경제의 바다에 빠뜨리는 것, 제재보다 훨씬 효과적인 해법

중국의 대북경제협력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

- ▶ 냉전시기 중국의 대북지원은 '정치장부만 계산, 경제장부를 계산하지 않는' 지원
- ▶ 중국은 일관적으로 정치요소를 경제이익보다 중히 여기면서 경제적 보답을 바라지 않았음.
- ▶ 북한 경제체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식, 경제발전, 국력증강, 민생개선이 체제안정의 근본이라는 것을 인식
- ▶ 북한의 시장경제의식 증강, 시장원리에 따른 운영방식, 북한 시장경제의 선도적역할
- ▶ 중국에 대한 의존도제고, 중국의 대북영향력 제고

북중 관계 회복의 패턴: 톱다운방식의 전방위적 관계 회복

- ▶ 1956년 8월 종파사건후의 긴장관계,
1957년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두차례 모스크바 비밀회동을 거쳐 타개
- ▶ 문화대혁명시기 심한 갈등
1970년 저우언라이 북한을 방문, 김일성과 회담, 문화대혁명때 빛은 갈등 해소
- ▶ 한중수교후의 갈등
1999년 북한 김영남 방중, 북중관계 복원, 뒤이어 김정일의 방중, 본격적관계개선
- ▶ 대북제재후의 갈등
2018년 김정은의 세차례 방중, 북중관계 회복

북중관계, 중한관계, 남북관계의 연동

- ▶ 남북관계 본질상 제로섬관계
- ▶ 중북관계는 중한관계에, 중한관계는 중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도
- ▶ 김정은 방중후의 중북관계 중한관계에 미묘한 영향
- ▶ 한국 남북미로 추진되는 비핵프로세스에 변수가 생길 것을 우려
북한이 중국을 뒷심으로 문제를 복잡하게 끌고 갈 가능성을 우려
- ▶ 남북관계개선과 북중관계회복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갈 경우 한중은 북한 무대에서 경쟁관계로 나설 가능성 북한경제개발 주도권의 쟁탈로 비칠 수 있음
- ▶ 한중은 상호 소통 강화, 협력을 모색, 경제블럭화와 경제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삼국의 로드맵을 그려나가야 할 것.

북한문제와 북핵문제 근원

- ▶ 냉전이 종식된 후 미국 한반도를 자기의 전략프레임에 가두어 놓음, “남방삼각”대“북한” 대결의 냉전구도 북핵문제발생의 근원
- ▶ 미국은 한반도냉전구도가 필요, 북한은 냉전구도를 탈피하려, 북핵은 미국의 대동아시아전략과 북한 생존전략의 충돌의 결과물
- ▶ 북핵게임의 결과,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전례없이 강화, 오바마시기의 아시아회귀전략, 트럼프의 인도-태평양전략
- ▶ 북한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나라들 모두 미국의 “제재프레임”에 갇혀 동북아의 경제협력체 구축 불가능
- ▶ 북핵문제의 근원적해결은 냉전구도의 해체, 냉전구도는 냉전의 방식으로는 해결 못함

북핵과 미국의 “제재 프레임”

- ▶ 미국은 ‘제재 프레임’ 으로 북한을 끝까지 밀어붙일 태세
- ▶ 그 프레임이 미국의 전략과 연동하고 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일 수
- ▶ 북핵문제 지금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북한의 생존 전략의 충돌
- ▶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한반도의 냉전 구도가 필요
- ▶ 미국의 많은 동맹 전문가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선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심히 우려,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문제 대두, 주일미군 문제도 부상, 미국의 냉전 전략가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
- ▶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으로 제재 프레임을 만들고 동북아를 그 속에 가둬놓는 게 중국과 대결하는 미국의 전략에 이로울 것

중국, 제재는 목적이 아님을 강조

- ▶ 중국 제재는 필요하지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
- ▶ 제재와 압박에만 올인해서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것
- ▶ 군사적 압박 받으면 북한은 핵포기의 필요성이 아닌 핵보유의 필요성을 느낄 것.
- ▶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심리가 깊어질 것
- ▶ 왕이 중국외교부장 제재와 압력에만 매달리는 것은 한반도미래에 대해 무책임한 것
- ▶ 유엔의 결의안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신축성 있는 정책을 강구할 것
- ▶ 북핵문제는 궁극적으로 제재가 아닌 지경학적 접근으로 해결, 경제교류와 협력은 필수적

중국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추진(1)

- ▶ 중국 북핵과 한반도문제의 근원은 바로 한반도 정전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냉전구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인식
- ▶ “냉전구도”가 존재하는 한 그로서 파생되는 군사적긴장 멈출 수 없다고 인식
- ▶ 미국의 주도하에 군사적역량과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는 안전보장방식은 냉전시기의 안전보장방식으로 인식, 동아시아 안전보장체제가 구축되지 못한 원인
- ▶ 북핵문제해결에서 표면적인 것과 근원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자는 표본겸치((标本兼治)의 안을 제시
-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로 “쌍궤병진”을 제시

중국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추진(2)

- ▶ 북한 4-6차 핵실험후 중국과 미국 책임론공방 사실상 북핵문제의 근원에 대한 논쟁
- ▶ “한반도 관련국들 평화조약 체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실현
- ▶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종식, 중대한 안보관심사를 해결
- ▶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추진은 중국이 국가이익에 부합
- ▶ 중국 북한과 미국이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 것을 주장,

중미갈등의 본격화, 북핵과 북중관계에 미칠 영향

- ▶ 북핵이 ‘맹아’ 상태였을 때 그 ‘자양분’ 은 북-미 갈등과 충돌 ‘성숙’ 단계에서는 미-중 갈등으로 비화
- ▶ 당대 주요 모순인 미-중 갈등에 의해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다른 갈등들이 파생
- ▶ 미국 신국가안보전략, 중국을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전략적 경쟁국’ 으로 규정
- ▶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참여시키려고 시도
- ▶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결의 전면전에 돌입, 미국 한반도문제에 전략적 접근, 북핵문제해결이 요원해질수 있을 것, 동북아 국제정치가 지난 시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전개될 것
- ▶ 북중관계 역시 중미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과정에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될 것

북중관계 정상적국가관계로 발전

- ▶ 김정은시대 중북관계에 나서는 가장 큰 걸림돌 핵미사일개발
- ▶ 북한이 핵무력완성을 선포하고 비핵화의지를 밝히면서 중북관계는 신속하게 개
- ▶ 일각에서 중북관계가 러시아와 연동하여 새로운 북방삼각으로 미국과 대결하는 냉전을 운운
- ▶ 중국은 냉전시기 소련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
- ▶ 중북관계는 여전히 냉전시기의 비정상적관계로부터 정상적인 국가관계로의 발전을 이어갈 것